



대북 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반도 안보와 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의 모색

백진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일은 결코 상호 모순되는 목표는 아니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실현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최대 과제이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흔들림없이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하며, 다음 세 가지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 공위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한 대북한 교류·접촉을 확대해가야 한다. 대북한 교류·접촉은 분명한 목표 의식과 원칙으로 해나가야 하며,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나 여론 주도층이 대북 접촉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 조성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야 하며, 남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지 신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평화·통일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진 대북 정책과 전략적인 4강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어릴 때 남북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도 막연한 이상만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머리말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와 통일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전자가 현실과 필연에 속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소망과 가능성의 세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처는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최대 소망이자 과제이며, 냉전체제의 와해로 통일은 이상의 영역에서 가능성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일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일은 일견 상충되는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상정하듯이,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안보를 강조하다보면 남북 관계는 대결적으로 흐르고, 이는 통일로 가는 남북한간 화

해와 협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다가도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위협을 발견하고 놀라곤 한다. 과연 안보와 통일은 상호 모순되고 상충된 목표인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일운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목표이며, 우리의 대북 정책의 최대 과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은 결코 상호 모순되는 목표는 아니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 안보를 허술히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의 소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본고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승리의 전략(winning strategy)'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점차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북한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위협의 실체

작년 가을 강릉에서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 간첩 침투 사건으로 우리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남조선 혁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를 냉전적 태도 또는 수구적 사고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한 마당에 북한이 무슨 남조선 적화를 꿈꾸며,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존과 체제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북한이 무슨 무력 도발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의 배경이었다. 또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설정, 외자 유치 관련 법령 제정, 남포남북합영공장의 가동 등을 예로 들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방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굳이 최근의 잠수함-공비 침투 사건을 지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각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정치

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이 그들의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국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조직이 존재하는 이상,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조직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마련이다. 더구나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군·대남 혁명 기구는 북한 권력의 기반이다. 잠수함 침투 사건이나 대남 적화 노선의 고수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말하자면,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은 북한체제의 존립 기반인 동시에 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인 셈이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술적인 조정은 있어도 남조선 혁명이라는 기본 전략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하나는 한반도 분단 이후 우리가 늘 보아온 북한의 모습이자 현실이다. 남조선 혁명을 그들 체제의 존립의 이유로 삼고,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력과 방대한 통일 전선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바로 그것이다. 조셉 나이 前 국방차관보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고 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110만 병력의 2/3 이상을 휴전선 인근

에 전진 배치한 가운데 공격용 미사일까지 갖춘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또 다른 현실이 있음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최근 우리에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과거의 후원국을 상실하고 국제적 고립에 몰린 가운데,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가 이제 거의 파국에 다다른 북한의 현실이 그것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상당수의 주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나, 외화난으로 식량을 사오지도 못하고 식량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업인 소위 제2 경제 부문에는 여전히 막대한 투자와 예산 분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전면적인 개방을 해야 하나, 그럴 경우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모습이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현실이며, 우리는 이 두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모습만 부각하고 다른 모습을 외면해서는 올바른 상황 인식을 할 수 없고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나온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된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

를 적대시하고 남조선 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은 우리의 안보에 근원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110만의 군과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호전적인 집단이 거의 회복 불능의 경제적 파국에 처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의 성격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또한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던 시대는 지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을 고려한 대북 정책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회고와 전망

1996년은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떨어졌던 한 해였다. 지난 연말,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로 일단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최근의 남북 관계를 지난 수년간의 시간적 맥락에서 조망해보면, 1992년 2월 남북한간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다소의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

곱 차례의 총리 회담을 거쳐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발효로 남북 관계는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남북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그 이후 거의 1년 반 이상 남북 대화는 단절된 바 있다.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합의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힘에 따라 남북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았으나, 역시 북한의 외면으로 별다른 진전을 거둘 수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책동을 자행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평화 협정 체결을 노리는 상투적인 전술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건설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기로 한 바 있다. 물론, 중심적 역할을 떠맡음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 북한 핵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한간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결과였다. 또 1995년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였으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계양 사건과 우리 지원 선박의 억류로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작년 4월에는 한미간 제주도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者 회담을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4者 회담에 관한 설명회에 북한이 참여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4者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으나, 설혹 4者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한반도 평화 문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터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온 양측간의 접촉의 채널도 위태롭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왔으며, 남북 경협도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지속되어왔고 특히 지난 여름 남북 경협 사상 최초의 남북합영공장이 남포에 문을 열어 가동하였다. 또 4者 회담도 최근 그 성사 가능성이 다시 커졌듯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수년간의 남북 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남북 관계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다. 주지하듯이 핵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통해 미국과 접촉 채널이 열린 후 북한은 우리와 공식적·당국자간 접촉을 철저히 거부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북 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철저히 외면하면 사실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피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구서독과 교류했던 구동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북한은 한국과의 접촉과 교류가 가져올 북한체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독이 든 당근(poisoned carrot)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통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로 남북한간 접촉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피하게 만든 불운한 측면도 있는 셈이다. 북한이 우리와 접촉을 피하는 두번째 이유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은 한미 동맹 관계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한미동맹체제를 그들의 대남 전략 실현에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두 가지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런 의도에서 북한은 한국 배제와 대미 접근을 그들의 대외 전략의 두 가지 기본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기본적인 자세와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당분간 이러한 자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으며,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는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큰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북한은 그들의 경제·식량 위기가 계속되는 한은 체제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그들의 체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접촉을 배제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과연 기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기존 정책의 변화와 개혁은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 집단이 기존 정책의 전환을 시도할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북한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엄청난을 감안하면, 정책이나 노선의 변화를 시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파국 상태의 북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의미있는 외부 지원은 남북 관계의 개선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또 다른 현실이며, 북한 권력 집단도 이를 깨닫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은 소위 '방충망식 개방'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개방과 남북한간 민간 접촉 등을 통해 꾸러가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설픈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대북 정책의 모색: 안보·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정치적·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에서 유래하는 위협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조차 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기존 군사적인 위협에 더해 체제 불안에 따른 새로운 위협까지 가미된 현실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인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대북 전략은 무엇인가? 사실, 대북 정책이란 누가해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또 대북 정책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만을 탓하고 있을 수도 없다. 말을 불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불가로 데리고 가는 노력조차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흔들림없이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무력 위협의 능력이나 의도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처럼 위협한 생각도 없다. 북한은 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하고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릴수록 도발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안보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또 산소와 같이 없어지면 사람이 한 시도 살 수 없지만,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고는 평화와 번영도 기대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한

미 연합 방위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좁은 한반도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제력이 중요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의 신뢰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장의 효과는 없더라도 꾸준히 대북한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북 접촉과 교류는 우리가 하겠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 또 북한이 잠수함 침투 사건을 일으키는 등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교류를 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고 채찍도 가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 교류와 접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북한 접촉과 관련, 다음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대북한 교류·접촉은 분명한 목표 의식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왜 북한과 교류와 접촉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대북 교류와 접촉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

론, 접촉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교류가 단순히 북한 스탈린 체제의 연명을 도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흔히 남북 교류나 경협이 자동적으로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되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집권 세력에게 숨쉬 공간만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한 교류와 접촉은 분명한 원칙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혹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교류와 접촉은 언젠가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 통일의 기회가 올 때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구서독은 소위 '독일 정책(Deutschland policy)'을 통해 구동독과 꾸준히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구동독 주민들은 구서독의 실상을 잘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구동독의 공산 정권이 몰락했을 때, 다수의 구동독 주민들은 구서독과 즉각적인 통일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과거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북한 접촉과 교류가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궁극적인 통일 실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것은 대북 접촉이나 교류는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남북 관계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묘안은 없다. 분명한 목표 의식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장의 결과에 기쁨·悲哀하지 않고 꾸준히 기반을 축적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내 여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언론이나 여론 주도층도 국민들 가운데 대북 접촉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조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적할 것은 교류와 접촉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지의 신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 교류에 있어 우리는 북한의 권력 집단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권력 집단과 주민의 분리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 협력, 또 탈북자 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지의 신장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결국 남북한간의 문제이므로,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분단 반세기가 되어가면서 주변국, 특히 주변 4강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들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효과적인 대북 정책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그 이후 경수로 협상, 또 북한의 평화 협정 공세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대체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미 분열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전략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정도로 공조체제가 완벽하게 운영되어온 것은 아니다. 사실 共助란 양측간에 아무런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즉, 양측간에 입장 차이나 갈등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잘 협조해서 조정하고 극복하느냐가 문제이다. 입장 차이가 없다면 공조도 필요 없을 것이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해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고, 이를 우방국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그들이 우리 입장에 동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 우방국의 의도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나 피해 의식을 지양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 우방국들과 북한의 접촉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의혹은 우리와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국력에 걸맞는 자신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 실현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우려와 경계심을 풀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한국의 대외 정책 방향이나 안보 정책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소 우리의

대의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는 미래의 통일과 장기적인 시각·전략적 고려를 염두에 두고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을 꾸준히 확대해가야 한다. 또 우리는 남북한간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궁극적인 통일 실현에 주변국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한 교류와 접촉 그리고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평화·통일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진 대북 정책과 전략적인 4강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듯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통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된다.

최근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의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나 각종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통일 후 독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통일 후 지난 6년간 독일 정부가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 투자와 지원은 1조 마르크(550조 원 - 6,7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은 아직도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기업도산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정신적 간격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동독이 완전히 구서독에 동화되려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5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구 동서독 통일 그 자체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1989~90년 독일 통일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콜 총리의 결단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두 개의 상이한 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사실

고통없고 부작용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에 따르는 도전은 엄청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제의 本末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의 영역의 문제로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성취해야 한다. 통합의 어려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자세이다. 통일의 기회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며 기회는 준비하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내부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역량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또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과 꾸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국제적 차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변국, 특히 주변 4강과 관계를 긴밀히 하여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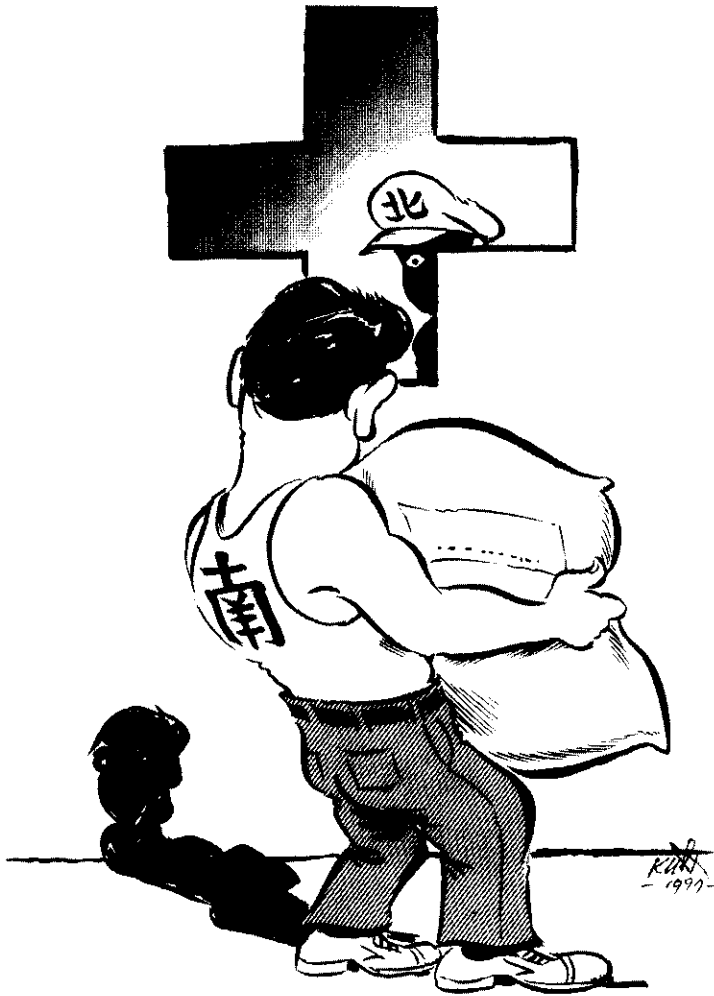
맺음말

남북 관계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며 우리 앞에 험난한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냉철

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안보·평화·통일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북한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는 나름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상대의 반응에 一喜一悲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꾸준히 실행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남북 관계도 조금씩 변해갈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도 막연한 이상만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統

〈漫評〉 ②5

적십자



“단일화... 對北지원창구”